

수입 찐쌀!! 우리 식탁을 위협한다

작년 중국에서 수입되는 찐쌀에 표백제 성분 검출로 수입 찐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후로 농림부, 식약청 등 정부 당국은 원산지 표시, 통관 시 검사 강화, 허위 광고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중국 찐쌀 문제 발생 이후 수입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기존 대형 외식업체 위주로 공급되던 수입 찐쌀은 이제 일반 가정의 식탁을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쌀협상에서 단순가공한 쌀에 대해서도 포괄해서 협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 편법적으로 쌀을 짜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찐쌀!! 올해는 1만톤을 넘어선다!

찐쌀은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천6백톤 정도로 연말까지 간다면 1만 톤을 넘기고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수입되는 찐쌀의 양이 국내 생산량 대비 0.0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지만, 아래 표와 같이 96년도 대비 수입증가률이 1000%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찐쌀 등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쌀과 쌀협상으로 MMA물량 확대와 밥쌀용 쌀 시판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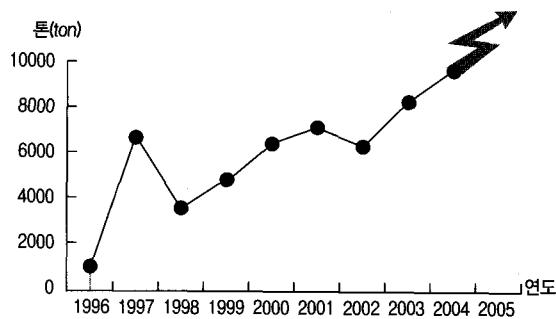
리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 찐쌀은 통관절차상 기타제조곡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고 다만 5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옆의 수입 현황 그래프를 보면 1998년도부터 조정관세가 부과되어 잠시 줄어들었으나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표백제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수입량이 감소하기는커녕 올해에는 1만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 조정관세란?

-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수입기의 최고 1백%까지 인상해 부과하는 제도 1년 단위로 운영
 - 현재 조정관세 70%까지 적용
 - 냉동민어(70%), 새우젓(55%), 찐쌀(50%), 혼합조미료(45%), 비나나(40%), 냉동꽁치(40%) 등 조정관세 부과
 - 04년 현재 2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 부과 중
- * 조정관세 품목수(기) : ('01년) 26 → ('03) 23 → ('04) 20

찐쌀 수입 현황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약 6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찐쌀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 찐쌀은 주로 김밥용으로 대형외식업체 위주로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급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7월 초에 있었던 광주의 중국 찐쌀 문제를 보면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찐쌀 광고 전단지를 일반 가정집에까지 배포하는가 하면 유기농, 무농약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일반 소비자를 혼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혼합미 형태로 20kg 포장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광주에서의 수입 찐쌀 문제 발생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서 수입 찐쌀의 광고 행태를 찾아봤을 때 '중국 흑룡강성 청정쌀,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무표백제' 등과 같은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리점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김밥 전문점이나 일반 식당, 대형급식소, 도시락 업체 등에서 중국 찐쌀을 사용한다 해도 소비자들은 그것이 중국산 찐쌀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맛도 현저히 떨어지고 유통과정과 안전성이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수입찐쌀의 광고 모습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입 찐쌀을 먹게 되는 것이다.

친환경 고품질 기조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쌀 생산 하에서 자칫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과 농산물이 저품질의 중국 찐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또한, 표백제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수입 찐쌀이 친환경, 유기농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저 가로 판매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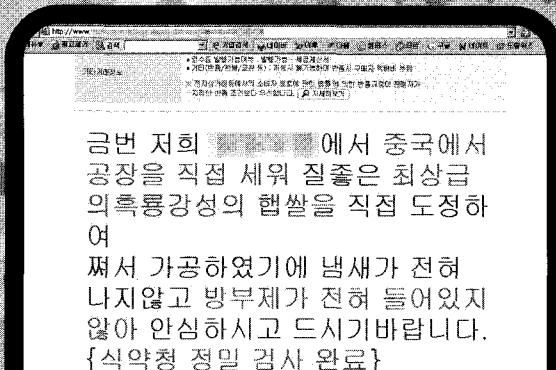
정부당국의 대책이 없다??

농림부나 식약청에서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수입 찐쌀이 일반 식품으로 취급되어 이를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에서의 경우와 같이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는 수준이고, 실제 7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거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특별 단속을 통해 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한다. 식약청 또한 수입시 표백제 성분 두 가지를 검사하는게 전부라고 한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 50%를 더 높이는 방안도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조정관세 대상품목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과 같은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계자는 이번 광주에서의 사례 이전에는 단 한건도 적발된 경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수입 찐쌀의 부정유통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수입 찐쌀 유통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농산물이 아닌 가공한 식품으로 들어오는 수입 찐쌀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 최근에는 일반 가정을 공략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의 사진은 인터넷 쇼핑몰의 수입 쌀 광고문구다.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니...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쌀 수입 증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주곡인 쌀이 최소한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식당에서 수입 쌀을 사용하는지 국산 쌀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쌀 이외에도 MMA물량을 통해서 밥쌀용도 시판될 예정이어서 그 대책이 미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부에서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듯이 쌀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 시 부과되는 50%의 세금을 출

이기 위해 허위로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경우는 없는지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관 시에만 표백제 성분 검사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보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작년 표백제 사용 논란 이후 식약청에서는 현재는 통관 시 거의 적발되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수입 후 누렇게 변색된 쌀을 보기 좋게 탈색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회성 전시성 단속이나 대책발표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쌀과 같은 농업통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당국의 대응 방안이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